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-115호

「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8일

#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“주변지역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,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함(안 제2조).

나.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함(안 제3조).

(1) 대전광역시장이 주변지역에 초·중·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

선사업,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,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.

- (2) 대전광역시장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다. 대전광역시장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4조).

라.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.

- (1)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,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.
- (2)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경제산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, 주변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 대표,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.
- (3) 위원이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,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 해당 안건에 자문, 연구, 용역 등을 한 경우,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,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 대상이 되도록 함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  
건설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lgsung64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변지역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,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초·중·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
  2.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
  3.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
  4.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주변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비 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
2.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위원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회의의원
  2.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
  3.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
  4.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축산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(당

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「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